

제21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4.7.5.(금), 청양군청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제21차 위원회 -

2024. 7. 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1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1. 개요

- 일 시 : '24. 7. 5.(금), 13시20분 ~ 15시20분
- 장 소 : 청양군청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장, 본위원, 지자체 군수*, 업무관계자 등 60여명
 - * 청양군수, 홍성군수, 진안군수,
- 주요내용
 - 제3기 교체대상 위원(3명) 위촉장 수여식
 - 안전 보고(2건)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등

2. 세부 일정(안)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우수지자체 홍보영상 시청	
13:20~13:25 (5')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및 성원보고	총괄기획팀장
13:25~13:35 (10')	○ 위촉장 수여식 및 사진 촬영	
13:35~13:40 (5')	○ 인사말씀	위원장
13:40~13:45 (5')	○ 환영사	청양군수
13:45~14:50 (65')	○ 안전 보고 및 논의 ①(보고)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 우수사례 발표(청양군, 홍성군, 진안군) ②(보고) 육상양식장 표준시설 개발 방안	농어촌분과장 (사례발표는 지자체 군수) 수산특위장
14:50~15:05 (15')	○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사무국장 세계특위장
15:05~15:10 (5')	○ 기타 사항 논의 및 폐회 - 논의 정리, 차기 본회의 일정 등	위원장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	태	평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최	상	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	미	령
	해양수산부장관	강	도	형
	국무조정실장	방	기	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	유	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前회장	이	성	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최	창	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최	홍	식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	승	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	숙	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前회장	박	대	조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前회장	김	성	호
	한국수산회 회장	정	영	훈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안	창	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박	정	희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김	기	명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	박	다	정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교수	김	민	경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	용	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김	창	길
	전남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김	태	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	한	호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류	방	란
	보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문	병	완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우	수	영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이	기	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장	판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	두	봉

목 차

○ 전 차 회의 결과 보고	1
○ 보고 안건	5
①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7
② 육상양식장 표준시설 개발방안(안)	41
○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우수사례	59
① 청양군 삶의 질 지수 우수사례	61
② 홍성군 삶의 질 지수 우수사례	77
③ 진안군 삶의 질 지수 우수사례	89

제 21 차 위 원 회

**전 차 회의
결과 보고**



회의명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기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일시	2024년 3월 20일(수) 10:00 ~ 12:00
개최방식	서울 중구 을지로 16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 대면회의
참석명단	위원장 : 재적 1명, <u>참석 1명</u> 당연직위원 : 재적 5명, <u>참석 3명</u> 위촉직위원 : 재적 24명, <u>참석 17명</u> (참고) 참석자 명단

진행순서

1. 전 차 회의 결과 보고
2. 특별 주제 발표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 혁신 구상” 이시혜 국장)
3. 안건 심의·의결 및 보고
4. 폐회

상정안건

1. (심의)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안)
2. (심의) 소비자 지향적 식품표시 인증제 활성화 방안
3. (심의) 수산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연계강화 및 활용 방안
4. (심의)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안)
5. (보고) 지역재생을 위한 산촌공간 활성화 방안
6. (보고) 농어업 관련 미래신사업 예측 및 전망
7. (보고) 2024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의결 및 결정사항 >

1. (심의)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안) : **원안 의결**
2. (심의) 소비자 지향적 식품 품질 표시 인증제 활성화 방안 : **수정 의결**
3. (심의) 수산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연계강화 및 활용 방안 : **원안 의결**
4. (심의)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안) : **원안 의결**
5. (보고) 지역재생을 위한 산촌공간 활성화 방안 : **원안 접수**
6. (보고) 농어업 관련 미래신사업 예측 및 전망 : **원안 접수**
7. (보고) 2024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원안 접수**

제 21 차 위 원 회

보 고 안 건
(2 건)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2024. 7. 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보고 요약

□ 추진배경

- 국가발전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도농 간 지역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 * 우리나라는 OECD 41개국 중 Better Life Index(BLI) 종합순위에서 32위(OECD, 2021)
 - ** 도시·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 편차: ('20) -1.2 → ('21) -0.8 → ('22) -1.1점 → ('23) -0.7점(KPEI, 2024)
- 농어촌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어촌 삶의 질 제고 노력이 시급하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수단 미흡
- 지자체가 지역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점을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면서 통합적인 삶의 질 지표체계 마련

□ 지표체계 및 지수 도출

- (지표체계)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로 구성
 - *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군별 공식 통계자료 활용
- (지수)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해 5개 영역 및 20개 세부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고,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영역별 및 종합지수 도출

□ 적용 대상 및 공개 방법

- (대상) 읍·면 소재 전체 139개 농어촌 시·군
 - 지수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 군 79개, 도농복합시 50개, 도시형 도농복합시 10개 지역으로 구분
- (공개) 도시형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129개 시·군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고,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상위 20% 발표
 - 도시형 도농복합시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비교 참조 값으로 활용

□ 2024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 결과

※ 2024년 5월 기준 기 공개된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표 및 지수 산출

- (종합) 129개 농어촌 시·군의 삶의 질 종합지수 평균은 41.64점이며, 농어촌 군 지역은 39.06점, 도농복합시는 45.73점
 - 도시형 도농복합시(평균 54.86)와 비교를 통해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확인
 - 삶의 질 지수 상위권에는 수도권 혹은 대도시·산업단지 인근, 산업특화도시 위주의 도농복합시 지역이 다수, 상위 20% 내 군지역은 3곳
 - 영역별로는 농어촌 군은 전반적으로 문화·공동체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도농복합시는 보건·복지와 지역활력에서 우세
 - 종합지수에서 군 지역은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충남 청양군 순, 도농복합시는 경기 이천시, 전남 광양시, 충남 아산시가 상위권 차지
- (경제) 129개 지역 평균 26.15점, 군 27.79, 도농복합시 23.55
 - 농어촌 군은 농어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나타낸 반면, 사업체 수가 적고 GRDP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
 - 도농복합시는 특정 산업군의 집중으로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과 고용률에서 지역 간 격차 존재
 - 군 지역은 경북 울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순, 도농복합시는 경기 이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가 상위권 차지
- (보건·복지) 129개 지역 평균 46.97점, 군 42.76, 도농복합시 53.61
 -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시형 도농복합시 평균(평균 66.22점)과 큰 차이 존재
 - 군 지역의 경우 기대수명과 보건복지예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살사망률이 높아 보건·복지 영역에서 특히 취약
 - 군 지역 중 경기 양평군,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순, 도농복합시에서는 경기 김포시, 충남 계룡시, 대구 달성군이 높은 점수 기록

- (문화·공동체) 129개 지역 평균은 55.97점, 도농복합시(평균 52.02점)에 비해 군 지역(58.47점)이 우세
 - 129개 지역 중 5위까지 충남 홍성, 충남 서천, 인천 강화, 충남 청양, 강원 화천 등 군지역이 차지, 도농복합시는 충남 계룡, 제주 서귀포, 전남 광양 순
 - 농어촌 군은 가족 중심의 생활 구조와 사회활동 참여로 삶의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
 - * 삶의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모두 군, 도농복합시, 도시형도농복합시 순
 - 도농복합시는 문화시설 접근성에서 농어촌 군에 비해 높은 점수 기록
- (환경·안전) 129개 지역 평균 52.10점, 군 지역 49.84, 도농복합시 55.66
 -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빈집이 많고 하수도보급률이 열악한 상황
 - 도농복합시의 하수도보급률은 농어촌 군보다 높지만, 도시형 도농복합시에 비하면 낮은 수준
 - * 지역유형별 하수도보급률(평균, 78.6%) : (군) 71.6 < (도농복합시) 86.6 < (도시형 도농복합시) 93.5
 - 군 지역은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 대구 군위군 순, 도농복합시는 경북 문경시, 전북 남원시, 충남 계룡시가 상위권 차지
- (지역활력) 129개 지역 평균 41.39점, 군 지역 30.44, 도농복합시 58.70
 - 5개 영역 중 도시형 도농복합시(72.02점)와 점수 격차 가장 크게 발생
 - 농어촌 군 지역의 경우, 인구증감율과 청년인구비율, 교통접근성이 특히 열악한 상황
 - 도농복합시는 상대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고, 인구 유입이 활발하여 청년인구 비율이 높은 편
 - 군 지역은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 대구 군위군 순, 도농복합시는 경북 문경시, 전북 남원시, 충남 계룡시가 상위권 차지

□ 향후계획

- (운영방향) 삶의 질 지표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통해 농어촌 삶의 질 종합정보체계 확대
 -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과 자료의 상호연관성 분석을 통해 지수 실효성 제고
 - 농어촌 삶의 질 지수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시점별로 주요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칭)지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제도정비) 지수의 신뢰성 유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법제화 추진
 - 삶의 질 지수를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
- (홍보·활용)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
 -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 결정에 지원
 -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하도록 유도

☐☐ 목 차 ☐☐

I. 추진 배경	15
II. 농어촌 삶의 질 지표·지수	16
1.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구성	16
2. 농어촌 삶의 질 지수 분류 및 발표	17
III. 2024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 결과 ...	18
1. 종합지수	18
2. 영역별 지수	22
IV. 향후계획	34
[참고]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세부 내용	35

I. 추진 배경

- 국가 발전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현실은 더욱 열악한 상황
 - 최근에 발표된 OECD Better Life Index(BLI)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OECD 41개국 중 32위로 경제 발전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
 - * ('17) 38개국 중 29위 → ('18년) 40개국 중 30위 → ('21년) 41개국 중 32위
 - 농어촌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지역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 * 도시-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 편차: ('20) -1.2 → ('21) -0.8 → ('22) -1.1점 → ('23) -0.7점(KREI, 2024)
- 농어촌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어촌 삶의 질 제고 노력이 시급
 -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 증가하고, 읍면 소재지에서조차 필수 생활서비스 시설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
 - * 인구감소지역 612개 면 중 약국이 없는 면이 '10년 345개에서 '20년 362개소(59.2%)로 증가, 음식점이 없는 면은 '10년 86개소에서 '20년 144개소(23.5%)로 증가
 -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고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화,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둔 지역 정책 필요
- 그러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삶의 질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다양한 기관에서 농어촌 지역의 통계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자료는 각각의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어 종합적 진단에 어려움
- 이에 지역의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삶의 질 지표 마련
 - 산출된 지수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의 미비점을 스스로 보완하도록 동인 제공
 -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Ⅱ. 농어촌 삶의 질 지표 · 지수

1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구성

- (지표 체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정책 효과 평가가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성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군구 단위 지표로 구성
 - ①신뢰 및 지속가능성, ②정책 효과성 및 포괄성, ③단순성, ④개방성 등 4가지 원칙* 고려
 - * ①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해야 하며, ②농어업·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 영역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③많은 통계를 포함하지 않고, ④사회 및 정책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 연구용역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로 구성
 - 5개 영역은 ①경제, ②보건·복지, ③문화·공동체, ④환경·안전, ⑤지역활력으로 구분
 - 각 영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지표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식 자료를 사용

<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영역 및 세부지표 >

	경제(4개)	보건·복지(4개)	문화·공동체(4개)	환경·안전(4개)	지역활력(4개)
내용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고용률(+) ▶시군구 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자살사망률(-) ▶기대수명(+) ▶간급복지지원율(-) ▶보건복지예산비율(+) 	▶삶의 만족도(+) ▶문화시설 접근성(+) ▶사회활동 참여율(+) ▶가족관계 만족도(+) 	▶빈집(-) ▶지역안전도(-) ▶하수도보급률(+) ▶주민 1인당 생활계 폐기물처리량(+) 	▶합계출산율(+) ▶인구 증감률(+) ▶청년인구 비율(+) ▶교통접근성(-)

주: (+) 또는 (-)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

- (종합지수) 표준화된 지표 값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지수 산출
 - 지표 항목에 대해 원자료의 분포와 정규성 검토하고, 선형변환* 방법 통해 지표 표준화
 - * 선형변환은 지표의 특성(순방향 및 역방향)에 따라 최대-최소값 사이에 지표의 위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0~1점 사이의 점수를 갖도록 변환하는 방법

-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를 통해 5개 지표 영역 및 20개 세부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산출
 - * 관련 부처 공무원(14.0%), 국책연구기관(41.9%), 대학·시도연구원(44.2%) 등 37명
- 표준화 지표의 가중평균으로 영역지수를, 영역별 지수 가중평균으로 종합 지수를 도출하고, 지숫값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100점 만점으로 변환

<지수 산출 방법>

* (예시)경제영역 지수

$$= \{(GRDP \times \text{지표가중치}) + (\text{고용률} \times \text{지표가중치}) + (\text{사업체수} \times \text{지표가중치}) + (\text{재정자립도} \times \text{지표가중치})\} \times 100$$

* 종합지수 = (영역별 지수 × 영역가중치)의 합

2 농어촌 삶의 질 지수 분류 및 발표

- (대상) 읍·면 소재 전체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하되, 지수 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로 유형 구분
 - (농어촌 군) 79개 농어촌 군 지역으로 구성
 -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농복합시(10개)와 일반 도농복합시(50개)로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용인·창원·화성·청주·남양주·천안·김해·평택·포항시)과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를 도시형 도농복합시로 분류
 - 나머지 47개 도농복합시와 광역시 내 3개 군(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일반 도농복합시로 분류
- (공개) 도시형 도농복합시 10개를 제외한 129개 시·군의 결과를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고, 종합상위 20% 발표
 - 지역 간 상황을 반영한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농어촌 군과 도농복합시로 구분
 - 도시형 도농복합시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비교 참조 값으로 활용

Ⅲ. 2024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 결과

※ 2024년 5월 기준 기 공표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수 도출

1 종합지수

□ (종합) 129개 농어촌 시·군의 삶의 질 종합지수 평균은 41.64점이며, 농어촌 군 지역은 39.06점, 도농복합시는 45.73점

○ 도시형 도농복합시(평균 54.86점)와 비교할 때,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확인
- 삶의 질의 기반이 되는 경제, 보건·복지, 지역활력에서 격차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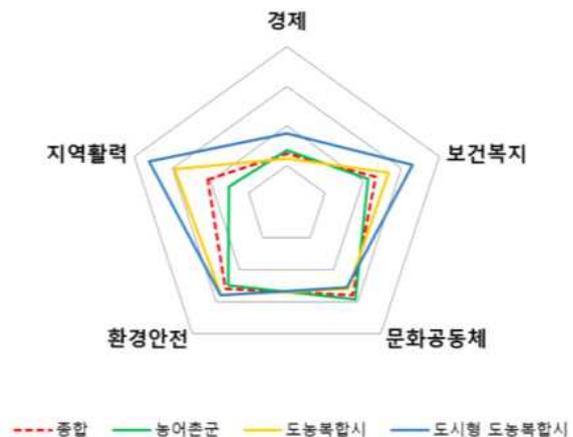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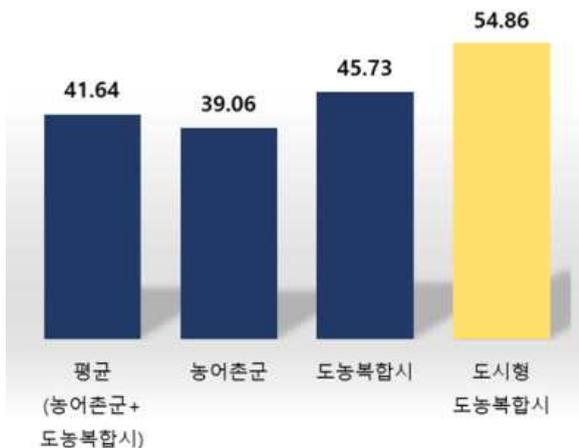
○ 삶의 질 지수 상위권에는 수도권 혹은 대도시·산업단지 인근, 산업 특화도시 위주의 도농복합시 지역이 상당수* 분포

* 상위 20% 지역(상위 20위) 가운데 농어촌 군지역은 3곳에 불과(울릉군, 옹진군, 청양군)하며, 도농복합시 17개 지역이 상위 지역에 포함

○ 농어촌 군은 전반적으로 문화·공동체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도농복합시는 보건·복지와 지역활력에서 우세

- 농어촌 군은 문화공동체에서 도농복합시보다 상위권*에 분포

* 문화공동체 상위 20% 지역(상위 20위) 중 농어촌 군 지역은 15개(홍성군, 서천군, 강화군, 청양군, 화천군 외 10개 지역)이며, 도농복합시는 5개 지역에 불과



- 반면, 경제적 여건과 발전 수준의 차이로 지역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경제 부문의 취약성 심화

〈 참고 〉 영역별 도농 비교(평균)

영역별	구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천 원)	고용률(%)	사업체수(개소)	재정자립도(%)
경제	농어촌 군	40,386	69.4	1,870	10.4
	도농복합시	45,182	62.5	8,604	20.3
	도시형 도농복합시	45,130	61.8	28,306	38.4

구분		자살사망률(%)	기대수명(세)	긴급복지지원율(%)	보건복지예산비율(%)
보건·복지	농어촌 군	23.7	83.0	5.9	20.4
	도농복합시	23.5	83.6	5.2	28.9
	도시형 도농복합시	21.7	84.1	3.3	34.1

구분		삶의 만족도(점)	문화시설접근성(분)	사회활동 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문화·공동체	농어촌 군	6.5	26.1	33.5	76.3
	도농복합시	6.3	22.2	30.7	74.4
	도시형 도농복합시	6.2	17.8	30.2	73.0

구분		빈집(%)	지역안전도(등급)	하수도보급률(%)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처리량(톤/인)
환경·안전	농어촌 군	14.1	2.9	71.6	1.6
	도농복합시	11.4	2.9	86.6	1.5
	도시형 도농복합시	7.6	3.2	93.5	1.2

구분		합계출산율(명)	인구증감률(%)	청년인구 비율(%)	교통접근성(분)
지역활력	농어촌 군	1.0	0.5	16.0	100.1
	도농복합시	1.0	1.3	22.2	34.6
	도시형 도농복합시	0.9	1.9	26.8	19.4

□ (농어촌 군) 79개 농어촌 군 지역은 경제와 문화공동체에서 강세이며, 7개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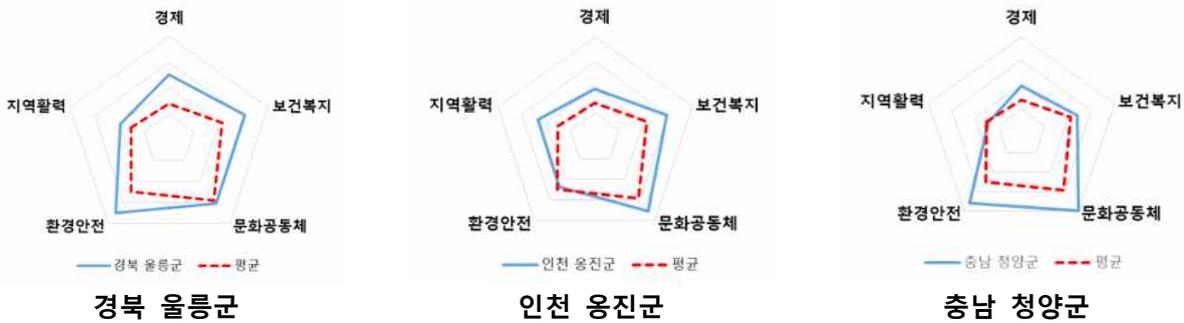
* 고용률, 삶의 만족도, 사회활동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지역안전도,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처리량, 합계출산율

○ 농어촌 군 지역은 산업적·계절적 특성으로 고용률이 높았으며, 개발로 인한 원주민 이주율이 낮아 공동체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농어촌 군 지역의 종합지수는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충남 청양군* 순

* 경제,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영역 지수는 도시형 도농복합시 평균보다 높은 편

- 경북 울릉군은 '경제, 보건·복지', 인천 옹진군은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지역활력', 충남 청양군은 '경제, 문화·공동체, 환경·안전'에서 상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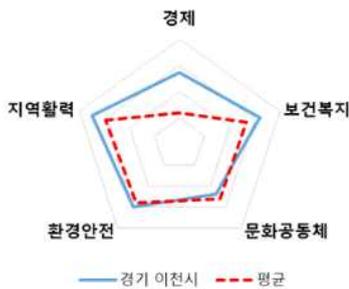


< 농어촌 군 종합지수 및 영역별 지수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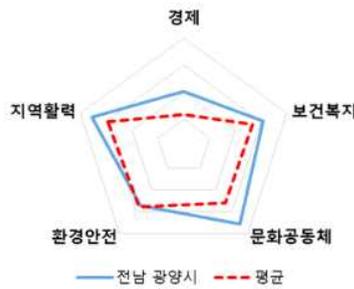
순위	종합지수	영역별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1	경북 울릉군	경북 울릉군	경기 양평군	충남 홍성군	전북 진안군	충북 증평군
2	인천 옹진군	충북 진천군	경북 울릉군	충남 서천군	전북 장수군	충북 진천군
3	충남 청양군	충북 음성군	인천 옹진군	인천 강화군	대구 군위군	전남 무안군
4	강원 인제군	경북 청송군	전남 담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군	전북 완주군
5	강원 양구군	전남 신안군	경북 칠곡군	강원 화천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6	강원 화천군	충남 청양군	충북 진천군	전남 무안군	충남 청양군	경북 칠곡군
7	충남 홍성군	인천 옹진군	경남 거창군	강원 양구군	경북 영양군	충남 홍성군
8	전남 담양군	전북 장수군	경북 예천군	인천 옹진군	전북 임실군	인천 옹진군
9	충북 증평군	강원 화천군	인천 강화군	전남 장흥군	경북 울릉군	강원 고성군
10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강원 인제군	경기 연천군
11	강원 고성군	경북 봉화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전북 순창군	경기 양평군
12	충북 진천군	경남 하동군	전남 장성군	전남 담양군	강원 정선군	전남 영광군
13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전남 장성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구군
14	전남 무안군	전남 영암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전남 함평군	충북 음성군
15	전북 진안군	강원 인제군	충남 청양군	강원 횡성군	경남 함양군	경기 가평군

□ (도농복합시) 보건·복지, 환경안전, 지역활력 영역에서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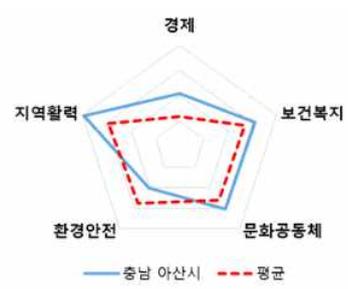
-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고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높으며, 복지 분야 투자가 활발하여 농어촌 군보다 높은 지수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
-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이천시, 전남 광양시, 충남 아산시 순
 - 경기 이천시는 '경제', 전남 광양시는 '경제, 문화·공동체, 지역활력', 충남 아산시는 '경제, 문화·공동체, 지역활력'에서 상위권



경기 이천시



전남 광양시



충남 아산시

< 도농복합시 종합지수 및 영역별 지수 순위 >

순위	종합지수	영역별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1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시	경기 김포시	충남 계룡시	경북 문경시	충남 아산시
2	전남 광양시	충남 서산시	충남 계룡시	제주 서귀포시	전북 남원시	충남 계룡시
3	충남 아산시	충남 당진시	대구 달성군	전남 광양시	충남 계룡시	경기 파주시
4	충남 계룡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강원 춘천시
5	경기 파주시	전남 여수시	경기 파주시	전북 정읍시	경기 여주시	경기 양주시
6	경기 김포시	충남 아산시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경기 포천시	전남 광양시
7	충남 서산시	전남 광양시	경기 광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구미시
8	경기 광주시	제주 제주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대구 달성군
9	충남 당진시	울산 울주군	경기 이천시	충남 당진시	경기 양주시	강원 원주시
10	울산 울주군	경기 광주시	전남 순천시	강원 삼척시	경북 영주시	경북 경산시

2 영역별 지수

1 경제 영역

- (종합) 농어촌 경제영역 평균 26.15점으로, 농어촌 군(평균 27.79점) 지역이 도농복합시 지역(23.55점)보다 높게 평가
 - 농어촌 군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낮은 GRDP를 기록하며, 사업체 수가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편
 - 반면, 농어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시기적·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용직의 고용이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 기록
 - 도농복합시는 특정 산업군의 집중으로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과 고용률에서 지역 간 격차 존재



- (농어촌 군) 평균 대비 GRDP, 사업체수, 재정자립도에서는 낮은 수준
 - 지역 간 지수 편차가 큰 지표는 GRDP로, 이는 경제구조와 주요 산업의 차이에 따른 영향*일 것으로 판단
 - * 농어업 중심의 지역은 GRDP가 낮았지만, 관광 산업이나 특정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높은 경향이 있음
 - 지역 간 지수의 편차가 작은 지표는 사업체 수로, 1차 산업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기 어렵고 사업체 수가 제한적
 - 농어촌 군 지역에 중소기업 유치 및 지원 정책 강화 및 창업 장려 필요

- 경제영역 지수는 경북 울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순으로 높은 순위
- 경북 울릉군은 '고용률', 충북 진천군은 'GRDP·사업체수·재정자립도', 충북 음성군은 'GRDP·사업체수·재정자립도'에서 상위권

< 농어촌 군 경제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경제영역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고용률	사업체수	재정자립도
1	경북 울릉군	충북 음성군	경북 울릉군	경북 칠곡군	충북 진천군
2	충북 진천군	충북 진천군	경북 청송군	충북 음성군	인천 강화군
3	충북 음성군	강원 화천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함안군	충북 음성군
4	경북 청송군	경남 함안군	전북 장수군	전북 완주군	경북 칠곡군
5	전남 신안군	경북 성주군	충남 청양군	충남 홍성군	경기 양평군
6	충남 청양군	전남 영암군	인천 용진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7	인천 용진군	강원 인제군	전남 진도군	경기 가평군	전북 완주군
8	전북 장수군	경북 고령군	경북 영양군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9	강원 화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봉화군	전남 무안군	경남 함안군
10	전남 진도군	강원 철원군	전북 무주군	전남 영암군	경기 연천군
11	경북 봉화군	강원 양구군	전남 고흥군	충남 예산군	충북 증평군
12	경남 하동군	전남 장성군	전남 보성군	경북 성주군	전남 화순군
13	전북 무주군	충남 예산군	전북 진안군	전남 해남군	강원 정선군
14	전남 영암군	강원 고성군	경남 산청군	전남 화순군	경남 하동군
15	강원 인제군	인천 용진군	전남 해남군	강원 홍천군	전남 영광군

□ (도농복합시) GRDP와 사업체 수, 재정자립도에서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 지역마다 주요 산업이 다르고, 산업 특성에 따른 고용 구조의 차이로 GRDP, 고용률, 재정자립도에서 지역별 편차 발생
- 지역별 편차가 작은 사업체 수는 농어촌 군보다 많으나, 수도권 및 도시형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준*

* 지역유형별 사업체수(개소): (군) 1,870 < (도농복합시) 8,604 < (도시형 도농복합시) 28,306

- 경제영역 지수는 경기 이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순으로 높은 순위
- 경기 이천시는 'GRDP·고용률·재정자립도', 충남 서산시는 'GRDP·고용률', 충남 당진시는 'GRDP·고용률'에서 상위권

< 도농복합시 경제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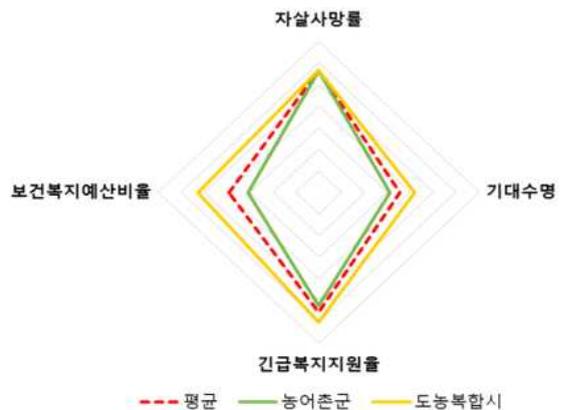
순위	경제영역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고용률	사업체수	재정자립도
1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시	제주 서귀포시	경기 김포시	경기 이천시
2	충남 서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당진시	제주 제주시	충남 아산시
3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주시
4	제주 서귀포시	울산 울주군	전북 남원시	경기 광주시	울산 울주군
5	전남 여수시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충남 아산시	경기 김포시
6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경기 이천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7	전남 광양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강원 원주시	제주 서귀포시
8	제주 제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상주시	경남 양산시	전남 여수시
9	울산 울주군	경기 파주시	경북 영천시	경남 진주시	대구 달성군
10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전남 나주시	경기 포천시	경기 파주시

2 보건·복지 영역

□ (종합) 농어촌 보건·복지영역 평균 46.97점으로, 농어촌 군(평균 42.76점)이 도농복합시(평균 53.61점)에 비해 저조*

* 도시형 도농복합시(평균 66.22점)와 큰 차이 존재

- **군 지역**의 경우 기대수명과 보건복지예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살사망률이 높아 **보건·복지 영역에서 특히 취약**
- 도농복합시는 보건복지예산비율과 기대수명이 높은 편



□ (농어촌 군) 평균 대비 기대수명, 긴급복지지원율, 보건복지예산비율이 낮은 편

- 평균보다 높은 자살사망률은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고, 인구 비율은 줄어들어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노출되는 현상 반영
 -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 간의 정기적 소통 기회 필요
-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수명은 농어촌 군 지역이 의료 시설 수가 적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부족함을 시사
 - 이동클리닉 도입 및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주요 거점에 보건소 확대 설치 등 고려 필요
- 보건·복지영역 지수는 경기 양평군,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순
 - 경기 양평군은 '보건복지예산비율', 경북 울릉군은 '자살사망률·기대수명·긴급복지지원율', 인천 옹진군은 '기대수명·긴급복지지원율'에서 상위권

< 농어촌 군 보건·복지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보건복지영역	자살사망률	기대수명	긴급복지지원율	보건복지예산비율
1	경기 양평군	전남 보성군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경북 칠곡군
2	경북 울릉군	전북 장수군	인천 옹진군	충북 진천군	경기 양평군
3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북 예천군	강원 평창군	충남 홍성군
4	전남 담양군	전남 곡성군	전남 담양군	전남 무안군	전북 완주군
5	경북 칠곡군	전남 신안군	전북 장수군	전남 영암군	충북 옥천군
6	충북 진천군	전남 담양군	전남 구례군	강원 인제군	인천 강화군
7	경남 거창군	경남 의령군	충남 홍성군	충북 음성군	강원 정선군
8	경북 예천군	경남 창녕군	전북 완주군	경북 울릉군	경기 가평군
9	인천 강화군	경남 거창군	경북 청송군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10	전남 무안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강원 홍천군	충남 서천군
11	전북 장수군	경북 울진군	충남 태안군	강원 횡성군	경남 창녕군
12	전남 장성군	충북 단양군	인천 강화군	충남 홍성군	경북 의성군
13	전남 곡성군	경기 양평군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충북 증평군
14	경남 창녕군	전남 장성군	전북 임실군	충남 태안군	충북 진천군
15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충남 서천군	강원 철원군	전남 고흥군

□ (도농복합시) 평균대비 기대수명과 보건복지예산비율이 높은 편

○ 긴급복지지원율과 보건복지예산비율에서 지역별 편차가 있으며, 기대수명은 평균에 비해 높고 지역 간 편차가 작은 편

- 인구 밀도와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복지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해 효율성 향상 필요

* 고령 인구를 위한 이동식 건강검진 차량 운영, 방문 간호 서비스 확대 등

○ 보건·복지 영역 지수는 경기 김포시, 충남 계룡시, 대구 달성군 순

- 경기 김포시는 '자살사망률·기대수명·긴급복지지원율·보건복지예산비율', 충남 계룡시는 '자살사망률·기대수명·긴급복지지원율', 대구 달성군은 '자살사망률 ·보건복지예산비율'에서 상위권

< 도농복합시 보건·복지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보건복지영역	자살사망률	기대수명	긴급복지지원율	보건복지예산비율
1	경기 김포시	충남 계룡시	충남 계룡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2	충남 계룡시	경북 문경시	경기 김포시	충남 계룡시	충남 계룡시
3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충남 서산시	경기 김포시	대구 달성군
4	부산 기장군	경북 상주시	제주 서귀포시	충남 서산시	부산 기장군
5	경기 파주시	부산 기장군	강원 춘천시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6	울산 울주군	전북 김제시	전남 순천시	경기 안성시	울산 울주군
7	경기 광주시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충남 당진시	경기 광주시
8	강원 원주시	경기 김포시	충남 당진시	울산 울주군	강원 원주시
9	경기 이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광주시	경북 구미시	경기 이천시
10	전남 순천시	경북 경산시	전남 광양시	충남 아산시	전남 순천시

3 문화·공동체 영역

- (종합) 농어촌 평균 55.97점으로, 도농복합시(평균 52.02점)에 비해 농어촌 군 지역(평균 58.47점)에서 우세
- 농어촌 군은 가족 중심의 생활 구조와 사회활동 참여로 삶의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
- 도농복합시는 농어촌 군에 비해 문화시설접근성에서 차이를 보이며, 비교적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농어촌 군)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자연에 밀접한 생활로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편
- 평균보다 낮은 문화시설접근성은 도농간 문화적 격차를 초래할 우려
 -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필요
- 문화·공동체영역 지수는 충남 홍성군, 충남 서천군, 인천 강화군 순
 - 충남 홍성군은 '삶의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 충남 서천군은 '삶의 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 인천 강화군은 '삶의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에서 상위권

< 농어촌 군 문화·공동체 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문화공동체영역	삶의 만족도	문화시설접근성	사회활동 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1	충남 홍성군	인천 강화군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군	충남 서천군
2	충남 서천군	인천 옹진군	강원 고성군	충남 부여군	인천 강화군
3	인천 강화군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4	충남 청양군	충남 홍성군	경북 칠곡군	강원 양구군	경북 영덕군
5	강원 화천군	전남 무안군	전남 담양군	경남 남해군	충남 홍성군
6	전남 무안군	전남 담양군	강원 철원군	전북 무주군	강원 영월군
7	강원 양구군	전남 장성군	충북 진천군	전남 장흥군	충북 음성군
8	인천 옹진군	충남 서천군	충남 예산군	전남 영광군	강원 횡성군
9	전남 장흥군	전남 장흥군	경북 고령군	전남 구례군	충남 청양군
10	전남 영광군	전남 영광군	충남 홍성군	충남 홍성군	경북 예천군
11	경남 거창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함안군	전북 진안군	충북 괴산군
12	전남 담양군	경남 합천군	경북 성주군	전남 곡성군	강원 평창군
13	전남 장성군	강원 횡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무안군	강원 인제군
14	경남 고성군	경남 함안군	충남 금산군	전북 장수군	경북 의성군
15	강원 횡성군	경남 고성군	충남 청양군	경북 울릉군	전북 순창군

- (도농복합시) 가족관계 만족도가 안정적이며, 문화시설 접근성이 높은 수준
 - 농어촌 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사회활동참여율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
 - 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축제, 공동체 봉사활동 등 지역 내 단체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생성 등 필요
 - 충남 계룡시, 제주 서귀포시, 전남 광양시 순으로 높은 순위
 - 충남 계룡시는 ‘삶의만족도·문화시설접근성·가족관계만족도’, 제주 서귀포시는 ‘삶의만족도·사회활동참여율·가족관계만족도’, 전남 광양시는 ‘삶의만족도·사회활동참여율’에서 상위권

< 도농복합시 문화·공동체 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문화공동체영역	삶의 만족도	문화시설접근성	사회활동 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1	충남 계룡시	울산 울주군	충남 계룡시	제주 서귀포시	전북 정읍시
2	제주 서귀포시	충남 계룡시	경기 양주시	전남 광양시	제주 서귀포시
3	전남 광양시	제주 서귀포시	강원 강릉시	충남 보령시	충남 당진시
4	울산 울주군	전남 광양시	경기 파주시	충남 공주시	강원 삼척시
5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대구 달성군	제주 제주시	강원 강릉시
6	강원 강릉시	경기 안성시	경남 통영시	전남 나주시	충남 계룡시
7	전남 순천시	경남 밀양시	경북 구미시	충남 서산시	충북 제천시
8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부산 기장군	충남 계룡시	전북 군산시
9	충남 당진시	강원 삼척시	경기 김포시	강원 강릉시	강원 원주시
10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경기 광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4 환경·안전 영역

□ (종합) 농어촌 평균 52.10점으로, 농어촌 군(평균 49.84점)이 도농복합시 (평균 55.66점)에 비해 저조

-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빈집이 많고, 하수도보급률이 열악한 상황
- 도농복합시의 하수도보급률은 농어촌 군보다 높지만, 도시형 도농복합시에 비하면 낮은 수준*

* 지역유형별 하수도보급률(%): (군) 71.6 < (도농복합시) 86.6 < (도시형 도농복합시) 93.5



- (농어촌 군) 전반적으로 하수도보급률이 낮으며, 지역안전도에서 지역 간 편차 발생
- 인구 밀도가 낮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지역 특성상 농어촌 군 지역의 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하수도보급률이 낮게 반영
 - 하수도 인프라가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도입을 통해 오수처리 방안 모색 필요
-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 대구 군위군 순으로 높은 순위 차지
 - 전북 진안군은 '빈집·지역안전도·하수도보급률·생활계폐기물처리량', 전북 장수군은 '지역안전도', 대구 군위군은 '지역안전도·생활계폐기물처리량'에서 상위권

< 농어촌 군 환경·안전 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환경안전영역	빈집	지역안전도	하수도보급률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처리량
1	전북 진안군	경북 울릉군	대구 군위군(공동1위)	충북 증평군	대구 군위군
2	전북 장수군	경기 연천군	전북 진안군(공동1위)	전남 구례군	강원 영월군
3	대구 군위군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공동1위)	강원 양구군	전북 진안군
4	전남 곡성군	전남 신안군	충남 청양군(공동1위)	강원 정선군	전남 구례군
5	강원 영월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영양군(공동1위)	충북 옥천군	강원 양양군
6	충남 청양군	충북 괴산군	전북 임실군(공동1위)	강원 고성군	충북 음성군
7	경북 영양군	대구 군위군	전남 곡성군(공동1위)	전북 진안군	강원 고성군
8	전북 임실군	강원 철원군	전북 순창군(공동1위)	경남 하동군	경북 고령군
9	경북 울릉군	전북 진안군	경북 울릉군(공동9위)	경남 남해군	충북 단양군
10	강원 인제군	전북 장수군	전남 신안군(공동9위)	전남 함평군	경북 칠곡군
11	전북 순창군	강원 화천군	충북 괴산군(공동9위)	강원 양양군	강원 인제군
12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공동9위)	전남 화순군	전남 곡성군
13	강원 고성군	인천 용진군	강원 영월군(공동9위)	전북 장수군	강원 평창군
14	전남 함평군	강원 인제군	경북 고령군(공동9위)	강원 인제군	경북 영양군
15	경남 함양군	충남 부여군	충북 영동군(공동9위)	경남 거창군	경북 영덕군

주: 1) 지역안전도는 등급으로 진단하여 등급별 동점 석차가 다수 발생함
 2) 지역안전도의 공동 9위는 총 21개 지역이며, 이 외에 전북 무주군, 경북 봉화군, 전남 장흥군, 강원 정선군, 경북 의성군, 강원 고성군, 전남 함평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충북 보은군, 경남 의령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합천군, 경북 청송군이 있음

□ (도농복합시) 도시형 도농복합시에 비해 빈집*과 하수도보급률에서 낮은 수준

* 지역유형별 빈집률(%): (도시형 도농복합시) 7.6 < (도농복합시) 11.4 < (군) 14.1

- 지역 간 편차가 작은 지표는 생활폐기물처리량으로, 이는 인구 밀도에 따라 비교적 처리 시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도농복합시에서는 경북 문경시, 전북 남원시, 충남 계룡시 순으로 높은 순위
- 경북 문경시는 '지역안전도·생활계폐기물처리량', 전북 남원시는 '지역안전도', 충남 계룡시는 '지역안전도·하수도보급률'에서 상위권

< 도농복합시 환경·안전 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환경안전영역	빈집	지역안전도	하수도보급률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처리량
1	경북 문경시	경기 김포시	경북 문경시(공동1위)	경남 양산시	경남 통영시
2	전북 남원시	경기 광주시	전북 남원시(공동1위)	경북 구미시	경기 여주시
3	충남 계룡시	경기 포천시	충남 보령시(공동1위)	경기 광주시	경북 경주시
4	충남 보령시	경기 파주시	충남 계룡시(공동1위)	울산 울주군	경북 영천시
5	경기 여주시	경기 안성시	전북 김제시(공동1위)	전남 광양시	경기 포천시
6	경기 포천시	강원 춘천시	경기 포천시(공동6위)	충남 계룡시	경북 문경시
7	전북 김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영주시(공동6위)	부산 기장군	전북 익산시
8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	경기 양주시(공동6위)	경기 양주시	제주 제주시
9	경기 양주시	대구 달성군	경기 여주시(공동6위)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10	경북 영주시	경북 경산시	충남 논산시(공동6위)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주: 지역안전도는 등급으로 진단하여 등급별 동점 석차가 다수 발생함

⑤ 지역활력 영역

□ (종합) 농어촌 평균 41.39점, 농어촌 군(평균 30.44점)이 도농복합시 (평균 58.70점)보다 저조

- 농어촌 군 지역은 인구증감율과 청년인구비율, 교통접근성이 열악한 상황
- 도농복합시는 상대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편



□ (농어촌 군) 도시에 비해 가족 중심의 문화가 유지되고 있어 지역별 합계출산율이 균일한 편

- 지역 간 교육과 일자리 인프라 불균형으로 청년인구 비율에서 편차 발생
 -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업 및 창농인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
-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전남 무안군 순으로 높은 순위 기록
 - 충북 증평군은 '인구증감율·청년인구비율·교통접근성', 충북 진천군은 '인구증감율·청년인구비율', 전남 무안군은 '청년인구비율·교통접근성'에서 상위권

< 농어촌 군 지역활력 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지역활력영역	합계출산율	인구증감률	청년인구 비율	교통접근성
1	충북 증평군	전남 영광군	충북 증평군	강원 인제군	전남 무안군
2	충북 진천군	전북 임실군	경북 울릉군	강원 화천군	충북 증평군
3	전남 무안군	대구 군위군	대구 군위군	충북 증평군	충남 홍성군
4	전북 완주군	경북 의성군	인천 용진군	충북 진천군	전북 완주군
5	강원 인제군	강원 양구군	전북 완주군	강원 양구군	경북 칠곡군
6	경북 칠곡군	강원 화천군	충북 진천군	전남 무안군	경기 양평군
7	충남 홍성군	강원 철원군	충북 음성군	강원 철원군	전남 화순군
8	인천 용진군	강원 인제군	전남 영광군	인천 용진군	전남 담양군
9	강원 고성군	전남 신안군	강원 인제군	경북 칠곡군	충남 부여군
10	경기 연천군	경북 청송군	강원 고성군	경기 연천군	경남 함안군
11	경기 양평군	전북 진안군	경북 예천군	전북 완주군	경기 연천군
12	전남 영광군	경북 성주군	충남 예산군	충북 음성군	전남 영암군
13	강원 양구군	경북 예천군	경북 성주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14	충북 음성군	전남 장흥군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경남 고성군
15	경기 가평군	경북 영덕군	강원 양양군	전남 화순군	강원 양양군

- (도농복합시) 인구증감율과 청년인구 비율이 높아, 젊은 인구의 유입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
 -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과 일자리 기회의 차이로 청년인구 비율에서 지역 간 편차 발생
 - 청년들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훈련 과정 등을 제공하고, 공연, 전시 등 문화 활동 지원 필요
 - 지역 간 편차가 작은 지표는 **합계출산율**으로, 농어촌 군에 비해 **낮은 수준**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 확대 필요
 - 도농복합시에서는 충남 아산시, 충남 계룡시, 경기 파주시 순으로 높은 순위
 - 충남 아산시는 '인구증감율·청년인구비율', 충남 계룡시는 '인구증감율·교통접근성', 경기 파주시는 '인구증감율·청년인구비율·교통접근성'에서 상위권

< 도농복합시 지역활력 영역 지표별 지수 순위 >

순위	지역활력영역	합계출산율	인구증감률	청년인구 비율	교통접근성
1	충남 아산시	경북 영천시	충남 계룡시	경북 구미시	경기 김포시
2	충남 계룡시	강원 삼척시	충남 아산시	경기 이천시	경남 진주시
3	경기 파주시	충남 서산시	경기 양주시	경기 파주시	부산 기장군
4	강원 춘천시	전북 김제시	경기 파주시	충남 아산시	강원 춘천시
5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강원 춘천시	경북 경산시	경남 양산시
6	전남 광양시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강원 춘천시	충남 계룡시
7	경북 구미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대구 달성군	전남 순천시
8	대구 달성군	경북 문경시	강원 원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파주시
9	강원 원주시	경북 상주시	경기 여주시	강원 원주시	경북 경산시
10	경북 경산시	전남 광양시	충남 당진시	경기 김포시	전북 군산시

IV. 향후계획

- (운영방향) 농어촌 삶의 질 지표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통해 농어촌 삶의 질 종합정보체계 확대
 -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과 지표 기반의 상호연관성 분석을 통해 지수 및 지표 활용의 실효성 제고
 - 지자체 및 지역 관계자 의견 수렴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지표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
 - 농어촌 삶의 질 지수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시점별로 주요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칭)지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지수 관리와 생산을 위한 농어업위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
- (제도정비) 지수의 신뢰성 유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 농어촌 삶의 질 지표가 타 계획 및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중단기 산출지표의 개선
 - 농어촌 삶의 질 지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홍보·활용)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
 -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지원
 - 농어촌 삶의 질 성과목표 설정 및 지자체에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하도록 유도

구분	내용	
경제영역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정 의	-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지역 내 경제 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
	측 정	- 지역내총생산을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산출
	출 처	- 통계청 국민계정 내 시군구 GRDP 자료로 연간 1회 시간 단위와 시군구 공간 단위로 지표를 제공(2021년 기준 자료 활용)
	고용률	
	정 의	- 지역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역별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고용률이 높을수록 소득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
	측 정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출 처	- 통계청에서 지역별 고용조사로 연간 1회 시간 단위와 시군구 공간 단위로 지표를 제공(2023년 기준 자료 활용)
	사업체 수	
	정 의	-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예방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측 정	- 시군구별 사업체 수
	출 처	- 통계청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자료로 연간 2회 시간 단위와 시군구 공간 단위로 지표를 제공(2022년 기준 자료 활용)
	재정자립도	
	정 의	-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 분석 지표로,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 -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방재정의 발전적 운영 등에 활용
	측 정	-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
출 처	- 통계청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로 연간 1회 시간 단위와 시군구 공간 단위로 지표를 제공(2022년 기준 자료 활용)	

구분	내용	
보건 · 복지 영역	자살사망률	
	정 의	-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지표
	측 정	- 해당 지역 내 자살사망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 십만 명당)
	출 처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 단위로 지표를 제공함(2022년 기준 자료 활용)
	기대수명	
	정 의	-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로,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측 정	- 0세의 기대여명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기대수명 지표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1년 기준 자료 활용)
	긴급복지지원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인원)	
	정 의	- 지역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가구 지원 지표 -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 후 사후에 집계
	측 정	- 지역 내 주민등록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출 처	- 보건복지부 행정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2년 기준 자료 활용)
	보건복지예산비율	
	정 의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중요 지표를 다루고 있지 못한 한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
	측 정	-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의 예산액이 전체 예산액에서 점유하는 비율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출 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2년 기준 자료 활용)	

구분	내용	
문화 · 공동체 영역	삶의 만족도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 가능
	측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10점 척도)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사회조사, 지역통계 자료로 2년에 1회 시간단위와 시도 또는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3년 기준 자료 활용)
	문화시설 접근성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주민의 문화시설 이용까지 소요되는 접근성(시간)을 측정하여 지역별 문화·여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문화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시간
	측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망도 자료와 GIS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거주지에서 가장 인접한 문화시설까지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을 산출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지리정보원 500m 공간단위로 연간 1회 제공하는 인구격차 자료와 GIS 네트워크 분석 활용(2022년 기준 자료 활용)
	사회활동 참여율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사회활동 단체*별 참여 인구를 측정하여 지역별 네트워크 형성 규모와 사회자본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 사회활동 단체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종교 분야 단체와 지역, 친목, 교육단체 등
	측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사회활동에 1회 이상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5년에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0년 기준 자료 활용)
	가족관계만족도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만한 가족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역별 가족관계 만족도 지표를 통하여 지역별 가족과 공동체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측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약간 만족',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출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사회조사, 지역통계 자료로 2년에 1회 시간단위와 시도 또는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2년 기준 자료 활용)

구분	내용	
환경 · 안전 영역	빈집	
	정 의	-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 지역의 빈집 유무는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 안전, 경관 등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측 정	- 지역별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의 비율
	출 처	- 통계청 빈집비율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2년 기준 자료 활용)
	지역안전도	
	정 의	- 지역 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 재난, 사고, 질병관리 등 분야별로 지역의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지역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지역별 안전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에 활용
	측 정	- 지역별 6개 분야에 대한 상대등급(1등급일수록 안전)
	출 처	- 행정안전부 지역안전등급현황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2년 기준 자료 활용)
	하수도보급률	
	정 의	- 지역별 하수*가 안정적으로 배출되고 처리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 * 하수는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액체성, 고체성 오염물이 물과 섞여서 배출되는 것으로 지역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측 정	-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인구의 비율
	출 처	- 한국환경공단 하수도 통계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2년 기준 자료 활용)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처리량	
	정 의	-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이 적재적소에 적정한 시간에 맞추어 폐기가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폐기물 발생 총량 대비 처리량은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측 정	- 주민 1인당 배출하는 생활계폐기물 처리량
	출 처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지역별 생활계폐기물 처리량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1년 기준 자료 활용)

구분	내용	
지역 활력 영역	합계출산율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여성들이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지 파악하여 지역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 - 대한민국 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인 요인 중 출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 주택,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
	측 정	-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2년 기준 자료 활용)
	인구증감률	
	정 의	- 지역별 인구증감, 감소를 평가하여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측 정	- 전년도 인구수 대비 인구수의 증가 또는 감소 비율
	출 처	- 통계청 주민등록총인구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2년 기준 자료 활용)
	청년인구 비율	
	정 의	- 지역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측 정	- 총인구 중 청년인구(19세~34세 이하)의 비율
	출 처	- 통계청 주민등록총인구 자료로 연간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2022년 기준 자료 활용)
	교통접근성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계구 중심에서 서비스(판매) 시설까지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거리를 지표화 - 농어촌 주민의 판매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대중교통서비스 수준 판단 가능
	측 정	- 해당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접한 서비스(판매) 시설까지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
	출 처	- 교통통계에서 연 1회 시간단위와 시군구 공간단위로 지표를 제공 (2021년 기준 자료 활용)

육상양식장 표준시설 개발방안(안)

2024. 7. 5.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육상양식장 표준시설 개발방안(안) 요약

1. 양식산업 현황

- 수산물 소비 증가, 기후 변화, 조업량 감소 등에 따라 수산물 양식 생산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

* 세계 양식생산량 1억 2,603만톤, 생산액 약 400조원(FAO, 2023)

** 수산물 생산량 중 양식생산 비중 10.3%(FAO, 1980) → 57.7%(FAO, 2021)

- 정부도 양식산업의 산업적 잠재력을 인지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산업 육성 추진 중

2.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현황 및 문제점

- 육상양식장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되며, 일부 법령의 규율만을 받아 시설 자유도가 높은 편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조·고수온 방지시설, 월동시설 등 설치의무 존재

- 표준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며, 일부연구(국립수산과학원, 2010)에서도 수조 등 설비가 아닌 구조물에 대한 연구만 진행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부재로 인해 설계비용의 부담이 높으며, 건축기간 추가 소요, 육상양식장 특화 건축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 발생

* 「건축법」에 따라 육상양식장을 설계·건축하므로 매번 기초설계부터 실시 설계 개별 추진, 인허가기간 등 고려 시 6개월 이상 기간 추가 소요

⇒ 자연환경 제약이 적고 스마트 기술 접목에 유리한 육상 양식산업 확대 및 표준설계, 표준설비(안) 마련 등 표준화 기반 마련 필요

3. 국내외 표준설계 사례

□ (국내) 축산분야: <축사 표준설계도>

- 축사 설계비 절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축사설계기술자문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축사 표준설계도> 개발
- <표준설계도> 무료 보급, 교육 등을 통해 농가 설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표준설계도> 이용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 * <표준설계도> 이용 시 건축사 설계·감리지정, 조경, 소방 대상 건물 면제
- 한우, 양돈, 닭, 오리 등 총 123종(1,265개 가변 모델) 개발

□ (국외) 일본: <육상양식장 설계지침>

- 육상양식장 설계 시 건폐율, 전용면적, 토목·시설 기준 및 시공 가이드라인 제시

4.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대효과

- 표준설계 도입 시 ①신규진입 활성화로 인한 양식장 공급 확대, ②설계·건축비용 감소, ③인허가 및 건축기간 단축, ④표준화에 따른 스마트화 기반 조성 등 다양한 기대효과 발생

5.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방안

□ 실태조사를 통한 설계부터 보급까지 단계적 접근

- ①실태조사, ②전문가 자문, ③설계용역, ④기술 심의, ⑤관계부처 협의, ⑥표준설계(안) 마련 및 보급

□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 조성

- 표준설계(안) 활용 시 설계비 절감 외 인센티브(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제공, 민간 설계(안) 인증제도 도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시설 표준 개발 이후 설비 표준 마련

- 단기적으로 육상양식장 구조물, 수조 등 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소발생기 등 설비에 대한 표준 수립
 - * 표준 설비기준 마련을 통해 호환성, 사후관리 용이성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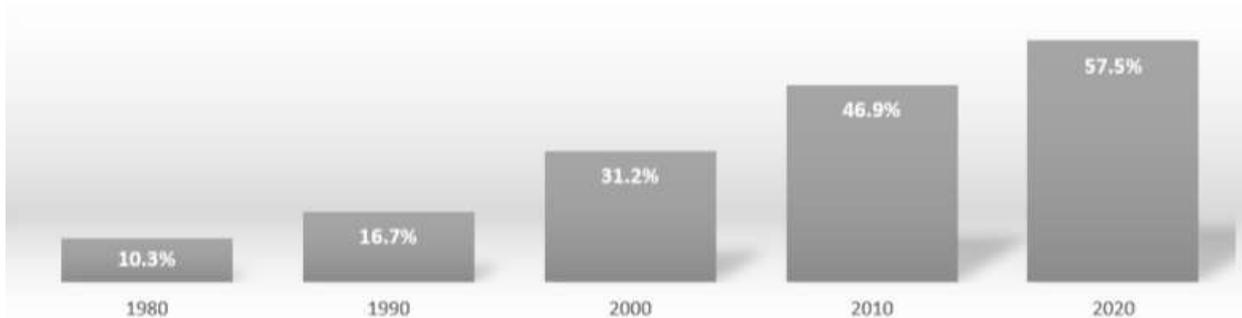


I.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47
II. 육상양식장 현황 및 표준설계 개발의 중요성	48
III. 국내외 표준설계 개발 현황	51
IV.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방향 및 정책제안	54
V.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의 기대효과 ·	56

I.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 수산물의 세계적 선호도 증가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양식수요 확대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은 수산물 소비량이 아시아 지역 주도로 2030년까지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 식량 수급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식량공급원으로써 양식업이 주목
 - 세계 수산물 생산량에서 양식 생산(해조류 포함) 비중은 57.7% 이상(2021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
 - FAO(2018년) 발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수산물 소비량 중 양식 수산물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수산물 생산 중 양식비중 현황 >



- 연근해어업 생산량 한계와 양식업의 산업적 중요도 증대
 - 기후변화 및 어업인구 감소 등으로 연근해어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량의 지속적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반면,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어획수산물 생산량을 초과하면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측면에서 양식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
 - 2000년 이후 해면양식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해면양식업(62.9%) 생산 비중은 연근해어업(24.6%)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남(2022년 기준)

- 환경제약 극복 및 스마트 기술 접목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육상양식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전통적인 어로어업 및 해수면 양식업에 비해 육상양식업은 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음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문제에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기존 양식업의 스마트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스마트·친환경 육상 양식 기술 개발이 핵심 과제로 선정, 2030년까지 스마트 양식 도입 비율 50% 확대 추진 계획
- 육상양식의 활성화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표준설계 개발 필요
 - 현재 육상수조식양식장 신규 건립의 기초설계는 일반적으로 양식업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건축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음
 - 어가의 높은 설계비용을 완화하고, 어종별, 지역별 시기적절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육상양식분야 현장 전문가 필요
 - 육상수조식양식장의 표준설계 개발을 통해, 신규 귀어인 및 스마트 양식 전환 양식업자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Ⅱ. 육상양식장 현황 및 표준설계 개발의 중요성

1 육상양식장 현황

- 육상해수양식은 광어, 새우 등을 중심으로, 육상내수양식은 뱀장어, 메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 기준 양식업 허가 건수는 총 4,732건으로 육상양식업이 1,730건(수조식 1,143건, 축제식 587건), 육상종묘생산업이 1,631건임

< 표 > 천해양식업 허가 건수

구 분	2019	2020	2022
총 계	4,001	4,258	4,732
해상종묘	977	1,142	1,371
육상종묘	1,584	1,610	1,631
육상양식	1,440	1,506	1,730
- 수조식	964	993	1,143
- 축제식	476	513	587

2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선행연구

- 육상양식장의 시설기준은 최소한의 규모와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 표준시설에 대한 규정은 미흡
- 육상양식장의 표준시설, 표준설계도 등의 부재로 양식장 건립의 자율성은 높은 편이나 건립비용의 증가 문제도 함께 발생

< 표 > 육상양식의 시설기준 규정(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양식업의 종류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설기준	
		규모	시설 및 장비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수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 수질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2조, 별표 1 제1호 및 비고, 같은 시행규칙 제87조 및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의 조치
	2.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2. 적조·고수온 방지시설 액화산소 공급장치, 고순도산소(순도 90퍼센트 이상)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 다만, 강원도, 경상북도 울릉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업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시설면적 0.2헥타르 이상	3. 월동시설 월동이 필요한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월동시설(시설규모, 시설비율, 수심 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양식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야 한다)
	2.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 육상양식장의 시설표준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양식시설표준화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목적 및 필요성이 양식 활성화와는 거리가 존재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양식시설 표준화 연구’에서 육상양식장 2종에 대한 양식시설 표준안 마련이 연구내용에 포함됨

- 양식시설물의 특성상 자연적 재해에 취약하여, 피해발생시 잔존가치 및 재해복구지원비 산정 등 계량적 기준 필요에 의해서 연구 추진
- 연구의 목적도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시 합리적인 지원기준 및 내풍·내설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표준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

3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의 중요성

- 육상양식장 건립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신규 진입활성화 가능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를 활용하여 현대적이고 안전한 양식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양식업자와 신규진입자 등의 비용참고자료 활용 가능
 - 양식시설 표준설계에 대하여 향후 어업인의 시설설치 시 참고 할 수 있는 적정 설치비용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자연재해로 인한 육상양식장 피해 방지 가능
 - 기상재해에 따른 육상양식시설의 피해경감을 위해 내재해형 표준설계 개발을 통해 양식업 안정성 확보 가능
 - 표준시설을 통한 규격화로 현대적이고 안전한 육상양식시설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양식업자들의 재해로 인한 피해감소와 소득증대에 기여

< 그림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을 위한 세미나(2023) 발표자료



□ 스마트 첨단양식업으로 전환의 기반 마련 가능

- 최근 연이은 전기료 인상, 인건비 인상 등으로 악화된 경영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마트 첨단양식업으로 전환 필요성 높아짐
- 스마트 첨단양식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육상양식장의 시설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표준설계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등 연계가 필요

□ 대국민 안정적 수산물 공급기능 증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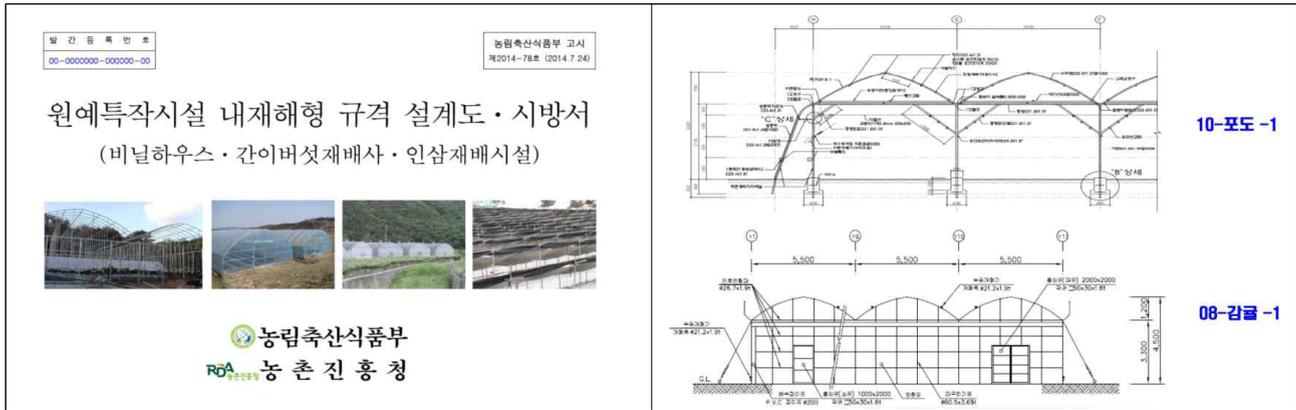
- 수산물 양식산업은 육류에 의존한 단백질 공급원의 대안으로서 양식업 혁신 및 육성에 대한 관심 증대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도입을 통해 생산관리가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산량 증대, 식품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Ⅲ. 국내외 표준설계 개발 현황

1 농림분야 사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규격)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개발의 추진은 2007년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지정 고시」가 제정되었음
-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 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
 - 고시가 제정된 이후 2022년 9월 8차 개정까지 지속적으로 규정 개정
- 농촌진흥청에서 규격설계도와 시방서를 공유하고 있으며, 설계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여 완성된 비닐하우스도 가상으로 확인가능

<그림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및 시방서



2 축산분야 사례(축사표준설계도)

- 농식품부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2009)의 일환으로 개발된 '축사표준 설계도'는 축사 설계비 절감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를 목적으로 함
 - 농협은 축사표준설계도 교육영상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제작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가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음
 - 최근 사육환경의 자동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사 도입 및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축사표준기준 개발이 추진 중

<그림 > 축사표준설계도 예시(좌) 및 축사표준설계도 교육(우)



-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를 표준설계도를 활용하여 건립 시, 농가의 설계비 부담 완화, 각종 절차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

- 축사표준설계도 이용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건축신고 가능), 다양한 구조 선택 및 농가 사정에 따라 축사 규모 선택 적용이 가능함
- 허가 규모(400 m²이상) 건축 시 건축사 설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외 건축사 감리 지정, 조경, 소방서 대상 건물 면제 가능
- 현재 축종별 표준설계도의 개발은 한우, 양돈, 닭, 오리 등 총 123종 (1,265 가변 모델)에 대해 개발이 되어있음

<그림 > 축종별 표준설계도 개발 현황



3 국외 사례

- 일본은 친환경 육상양식장 구축에 관한 최적 설계지침을 개발하여 건폐율, 내재해 기준, 시공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일반 건축물에 준용되는 부지 면적당 건축 기준에 준하여 최적의 육상양식장 설계지침(안)을 수립
 - 육상양식장 구축을 위한 건폐율 및 전용면적에 관한 기준 마련, 품질이 확보된 토목 및 시설기준, 시공 가이드라인 제시
- 노르웨이는 2021년 양식업 전략 발표하고 기업형 대단지 양식체계를 통해 2050년까지 5백만 톤 양식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양식시설의 표준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양식 기술 보유

IV.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 방향 및 정책제안

1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 방향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을 통해 비용절감, 자연재해 피해저감, 생산성 증대, 스마트 양식 확대, 육상양식 활성화 등 도모
- 육상양식장 건립의 전문성 부족, 과도한 설계·건축 비용 발생,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표준설계 개발 추진

<그림 > 표준설계를 통한 육상양식장 현재와 미래

AS-IS		TO-BE
□ 건축전문가 중심의 육상양식장 설계로 전문성 부족	▶	□ 건축, 양식 등 전문가 협업을 통해 개발·검증된 전문성 높은 표준설계 적용
□ 육상양식장 건립에 과도한 설계·건축 비용 발생	▶	□ 표준설계 적용으로 설계 및 건축(토목) 비용 경감
□ 건립 희망자(어업인)의 육상양식장 건립관련 정보 부족으로 진입결정 어려움	▶	□ 표준설계 및 적정금액 확인을 통한 육상양식 진입장벽 완화
□ 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시설피해 지속적 발생	▶	□ 내재해형 규격이 포함된 표준설계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경감
□ 경험 중심의 시설로 양식 생산성 및 효율성 한계	▶	□ 표준시설, 표준설비 적용을 통한 고생산성, 고효율, 편리성 높은 양식환경 구축
□ 노동집약적 육상양식장이 대부분, 시설 구조상 스마트 첨단 양식으로 전환 어려움	▶	□ 스마트 첨단양식 전환 가능한 표준설계 적용으로 스마트 양식장 확대

2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을 위한 정책제안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하여 민간적 차원에서 발전되어야 함
- (1단계 : 방향설정)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본방향 검토
- (2단계 : 실태조사 및 표준설계 연구 추진)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실태조사 등

- (3단계 : 해양수산부 중심 기본설계)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마련을 위한 설계용역 :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의 인정 및 등록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표준설계를 활용하여 건립 시 다양한 수요자 혜택을 확보 필요
 - 정부가 무료로 보급하여 양식어가에서 별도의 설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 이외에도 여러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 이용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건축신고 가능)
 - 다양한 구조 선택 및 양식장 특성에 따라 여러 규모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표준설계가 개발
- 중장기적 육상양식장 내기자재 및 시스템, 에너지관리 등을 포함한 스마트 육상 양식장 시설 표준 개발
 - 단기적으로 육상양식장 구조물과 수조 등 시설에 대한 표준설계 개발
 - 중장기적으로 육상양식장의 설비에 대한 표준설계 등을 포함하여 육상양식장 전체 표준설계 및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
 - 탄소중립 및 전기료 인상에 대비한 고효율·에너지 절감형 설비기준 마련 및 데이터 기반의 전기안전 관리시스템 표준도 개발 필요

<그림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을 위한 정책제안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모델의 육상양식장 시설 표준설계 개발 연구 추진 - 지역별, 시설규모별, 품종별 표준설계 실태 및 개발 연구추진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인정 및 등록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마련 - 해양수산부 고시, 관련 지침 등 인증제도 마련 - 표준설계에 대한 무상보급, 관련 교육·홍보 추진 - 기존 시설 구조변경 시 다양한 맞춤형 표준모델 무상 보급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양식장 내 기자재 및 시스템, 에너지관리 등 포함한 스마트시설표준 개발 추진 - 어업허가 시 시설물 허가 의제 처리방안 마련(양식산업발전법 개정 등)

V.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의 기대효과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도입은 기술적 측면, 경제 산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기술적 측면
 - (생산성) 건축형태, 설비 및 운영시스템 등 대상 양식 생물에 최적화된 설계를 통한 생산성 증가
 - (효율성) 육상양식장내 기자재 및 시스템 설치방법에 대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스마트양식시스템 활성화 촉진
 - 경제 산업적 측면
 - (편의성) 수요어업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육상양식장구축의 소요 경비를 계획(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 정보취득 편의성 확보
 - (비용절감) 규모별 육상양식장의 구축에 관한 합리적인 예산 수립 기반 마련, 표준설계를 통한 육상양식장 건립비용의 절감
 - 사회적 측면
 - (수산업 발전) 표준설계를 통한 육상양식장 최적 설계를 통해 양식 산업 발전의 실효적 성과 도모
 - (친환경) 육상양식장별 시스템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에너지 절감유도, 탄소배출량 감소
 - (어촌유입) 육상양식 진입장벽 완화로 신규 어업인 진입 활성화 및 어촌소멸 방지 효과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도입에 따른 경제적 계량효과를 추정하면 연간 약 153억원 규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추가 상세 연구 필요

- 신규건립 확대 효과 : 34.2억 원
 - 신규 57개소(허가건수의 약 5% 증가 가정)의 연간 순이익 개소당 0.6억 원 적용
- 건축비용 감소 효과 : 8.7억 원
 - 신규 57개소의 설계비용 및 감리비용 50% 절감
 - 설계비용 및 감리비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기준 적용 계산 개소당 설계비용 0.235억 원, 감리비용 0.070억 원으로 산정
- 설계기간 및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 : 11.9억 원
 - 신규 57개소 표준설계 이용에 따른 설계 및 인허가기간 단축 (6개월) 가정, 건립비용 시간가치 산정

$$*11.9\text{억 원} = 57\text{개소} \times 8.33\text{억 원}(1\text{개소 건립비용}) \times 0.05(\text{연간시장이자율 } 5\% \text{가정}) \times 0.5(6\text{개월시간단축})$$
 - 모든 장비등에 대해 표준설계가 적용됨으로 인해, 공사기간 단축 및 총 건설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됨
-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도입에 따른 양식 생산량 증대효과 : 42.6억 원
 - 신규 57개소 표준설계 활용으로 생산량 10% 증가 가정, 매출액 증가 효과 산정
- 스마트화 기반 조성 효과 : 34.1억 원
 - 신규 57개소 스마트 양식 적용에 따른 조수익 30% 증가 가정
- 재해예방효과 : 1.7억 원
 - 신규 57개소 표준설계 활용에 따른 재해피해 시 개소당 피해액 0.3억원(최근 5년 육상양식장 피해금액 평균), 재해피해율 5% 가정
- 에너지 효율화 효과 : 19.9억 원
 - 신규 57개소 표준설계 활용으로 전기료(최근 3년 개소당 전기료 평균 1.75억 원)의 20% 절감을 가정

제 21 차 위 원 회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우수사례
(3건)**

**청양군 삶의 질 지수
우수사례**

농어촌 삶의질 지표 우수사례
2024. 07. 05.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1등 농촌, 청양군! 행복한 농촌, 청양이 만듭니다!



목차

I 청양군 일반현황

II 분야별 주요사례

1. **환경안전** 위기를 기회로, 정부 정책을 바꾼 청양
2. **지역경제** 기획생산으로 푸드플랜 전국 1위
3. **보건복지** 전국 최초, 주거 + 돌봄 + 의료 원스톱 시스템
4. **보건복지** 공공의료 혁신으로 암 수검률 전국 3위
5. **문화공동체** 주민이 주도하는 청양형 지역공동체



충남의 중심, 작지만 강한 농업군 청양



- ✓ 면 적 479.11 km² (충남의 5.8%)
- ✓ 인 구 29,971 명 (16,296세대)
- ✓ 농 업 인 16,216명 (8,855세대)
- ✓ 행정구역 1읍, 9면, 183개 행정리
- ✓ 행정조직 18개 실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읍 9면
- ✓ 재정규모 일반회계 4,457억원 + 특별회계 232억원

편리한 교통망 · 최적의 자연환경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소멸 위험 지역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행정 각 분야별 혁신 필요

표. 분야별 주요사례

01

위기를 기회로, 정부 정책을 바꾼 청양

(환경안전 영역)



표-1. 위기를 기회로, 정부 정책을 바꾼 청양

06

유례없는 폭우로 빗더미에 앉은 농민들

2년 연속 기록적 폭우 발생

구 분	2022년	2023년
폭우 기간	8. 10. ~ 14.	7. 14. ~ 15.
평균 강우량	390mm	430mm (7월 837mm)
주요 피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농가 2,506개소 □ 피해 복구액 686억원 □ 농경지 침수 495ha 이상 □ 가축피해 ↳ 닭 21만수, 칠면 422군, 수산 216만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1명, 이재민 46명 발생 □ 피해 복구액 876억원 □ 농경지 침수 633ha (벼우소 2100필) □ 가축피해 ↳ 소 233마리, 돼지 3100마리 돼지 등



신속한 복구 지원 노력

- 현실에 맞는 대책 건의
- 특별재난지역 선포
- 현실과 동떨어진 자연재해보상기준 변경
(67년 제정 농업재해대책법의 한계점 보완)

※ 신속한 피해복구 및 시설 개보수 가능

2022년과 다른, 근본적이고 빈틈없는 대책 마련 절실

바로고 실질적인 농민 피해보상

**신속하고 강력한 건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청양 등 충남 지역 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시설 개보수사업 국비 200억 확보
(시설 복구비 최대 80% 국비지원)
- 피해주민 납세 유예 ·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 피해능가에 대한 신속한 재해보상

**56년만에 전국 기준 혁신
정부 보상기준 개정**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 확대 방안 발표**

- 대파대 · 종자대 등 보조율 상향
기존 50% ▶ 개정 100%
- 56년만에 자연재해보상지침 개정
↳ 농기계, 농기자재 등 지원(56개 품목)
- 최대 520만원 특별위로금 지급

**전국최초 생산보장제도
충남도 소득보전 반영**



**정부 재난지원금 외
충청남도 소득보전금 받는다**

- 정부지원금 · 농협보험금 외
충남소득보전금 신규 지원 (60억)
- 하우스 작물 및 관련 시설물
복구비 전액 지원
(영농활동 체계 · 경영안정 도모)

표. 분야별 주요사례

02

**기획생산으로
푸드플랜 전국 1위**
(지역경제 영역)



청양군 농업 현실과 정책 방향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푸드플랜 정책 집중

민관 푸드플랜 추진체계 구축



푸드플랜의 전문적 ·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푸드플랜 기반시설 구축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

8개 시설 / 161억원 / 2018년 ~ 2023년



연간 농산물 유통 350품목, 70억원
한살림 협업을 통한 전처리 후 공공급식 납품

청양 먹거리직매장 (유성점)

대전 유성구 학하동 / 2020년 8월 개장



2023년도 매출액 32억원 달성
2024년도 40억원 목표

+

생산·판매 기반시설을 매개로 **대도시 소비시장** 확충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학교·공공급식·대전 직매장 등 푸드플랜 출하 농업인대상

안전성 분석센터

청양군 대치면 먹거리종합타운 내 (330m²)



주요 내용

- ① 전문분석 장비 39종, 총 6대 운영
- ② 잔류농약 463종, 중금속 2종 안전성 검사
- ③ 연간 1,500점 이상 분석 가능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청양 농산물 군수 품질인증제 5단계·15심천과제 시스템



인증혜택 (80% 지원)

품질인증 포장재 및 스티커, 제초제트, 농기구정리대, 농약 보관함, 농산물직매대, 동결기 생산보완시설 등

명품 농산물 출하를 위한 **안전 먹거리** 생산 시스템 구축

푸드플랜으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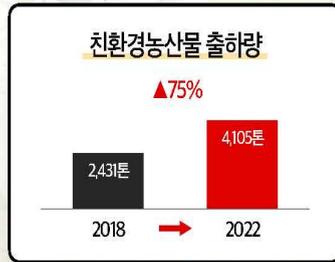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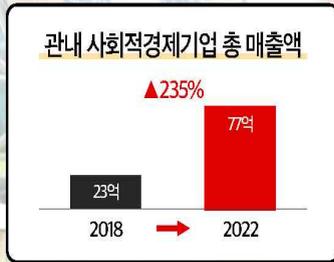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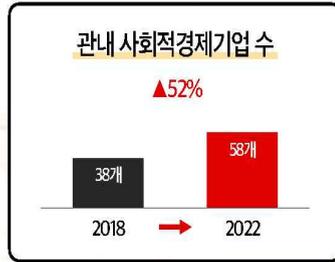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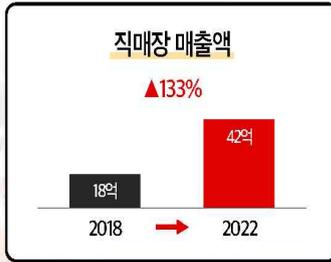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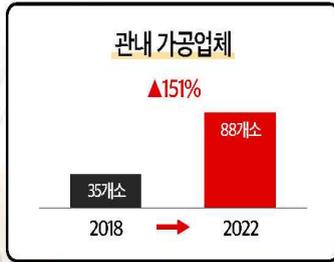


표. 분야별 주요사례

03

**전국 최초,
주거 + 돌봄 + 의료
원스톱 시스템**

(보건복지 영역)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필요

전국 최초, 농촌형 노인돌봄의 롤모델 구축



(지방소멸대응)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정책 사업으로 확산 예정**

II. 분야별 주요사례

04

공공의료 혁신으로 암 수검률 전국 3위

(보건복지 영역)



청양군

II-4. 공공의료 혁신으로 암 수검률 전국 3위

18

증가하는 의료 수요 · 빈약한 의료 복지

높은 고령화
의료수요 증가

증가하는 고령화율,
늘어나는 암환자

의료 수요 대비
의료시설 부족

요양병원 2, 의원 17,
치과 7, 보건의료원 1

필수 의료진
전문인력 부족

100% 공중보건의 운영
(전문의 無)

보건의료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

전문인력 확보 · 시설 확충

전문인력 확보



전문의를(7명)
신부인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인력(27명)
공중보건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최신 의료장비



의료장비 구축(25억원)
CT기, 내시경, 유방촬영기, 흉부방사선, 골밀도 측정기, 자동홍부압박기 등

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센터 설치('2020. 10.)
국가 5대 암검진 원스톱 시스템 구축 및 시행 (암검진 수검률 / 조기발견 증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65세 이상 무료 혈액·폐암 검진



암검진 360명 → 암 196건 판정 (판정율 55%)

찾아가는 의료원 방문진료 사업



주 2회 오지마을 순회진료 (77회, 2294명 진료)

공공의료 서비스 품질 압도적 향상



II. 분야별 주요사례

05

주민이 주도하는
청양형 지역공동체
(문화공동체 영역)



행정과 민간을 잇는 단계별 마을만들기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으로 실질적 농촌 공동체 활성화

농촌형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행정과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

주민주도형 공유·협력 문화 정착

청양 혁신플랫폼 외유

연간 6,200명이 방문하는 사회혁신 거점공간



'19년 행안부 지역사회활성화 공간조성사업 선정
중간지원조직 입주 + 공유오피스 + 소통공간

청양군 물품공유센터

충남 최초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나눔문화 형성



캠핑용품, 생활용품, 공구 등 70여종 대여 가능
청양군 청년네트워크 운영 (월~토)

청양군 농촌협약

청양형 돌봄 서비스 「함께돌봄버스」



읍·면 소재지부터 배후마을까지,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돌봄버스**로 접근성 향상

개인·조직간 소통·협력 강화로 행복한 농촌사회 기틀 마련

농어촌 삶의질 지표 우수사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등 농촌, 청양군!

행복한 농촌, 청양이 만듭니다!

공모사업
207건 선정
4,421억원 확보

충남도 공공기관
4개소 유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22만평, '26년 준공)

골프장 &
파크골프장
건립 추진

민간·임대 아파트
800호
건립 추진



**홍성군 삶의 질 지수
우수사례**

군민이 행복한 더 살기 좋은 농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종합지수
6위

문화공동체 영역 종합 1위

삶의 만족도
4위

문화시설 접근성
10위

사회활동 참여율
10위

가족관계 만족도
2위

홍성군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인구 10만의 도농복합 도시

2019년 충남혁신도시 지정



2023년 내포 미래신산업국가산업단지 지정



홍성군은

충남도청이 위치한 인구 10만의 도농복합 도시

2019년 충남혁신도시 지정

2023년 내포 미래신산업국가산업단지 지정



도시의 성장



전통적인 지역사회 해체와 개인의 사회적 고립 야기



도시 성장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도시 성장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

군민 체감 행복 시스템 구축

민관 거버넌스

+

농업자원

1958

1976

1994

2000

2013

풀무학교 설립

#국내최초 #협동조합
#전국확산 #농업기술학교

정농회 설립

#바른농업 #정신 #이념
#국내최초 #유기농업

유기농업 정례화

#오리농법
#도농일심 #도농교류문화

마을백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도농교류활성화
#지속가능한발전 #자립성

홍성통

#지역정책 #거버넌스
#사회문제해결 #시민참여



국내 최초 오리농법 도입



국내 최초 유기농업특구 지정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흥성통(通)

민관거버넌스, 흥성통이란?

흥성군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로 “통(organize)”으로 한데 모으고,
“통(exchange)”하게 잇고, 지역전문가 “통(nurture)”을 키운다는 뜻



2013년 흥성통 출범, 운영 12주년

2023년 80회 이상 운영, 1,690명 참여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흥성통(通)

흥성통 대표 활동 내용 ① 관광통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구성을 통한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 개발

2023년 체류형 관광객 1,300명 방문



4년 연속 DMO 평가 S등급

우수 지자체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흥성통(通)

흥성통 대표 활동 내용 ② 문화통

충남 유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사업 추진

지역콘텐츠 개발 (9,615명 참여),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 (5,897명 참여)



홍동면 문당마을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로컬100'] 선정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흥성통(通)

흥성통 대표 활동 내용 ② 문화통

충남 유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사업 추진

지역콘텐츠 개발 (9,615명 참여),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 (5,897명 참여)

군민의 사회적 참여 ↑



네트워크 강화



공동체성 회복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농업 확산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 확대

치유농업



- ✓ 농촌 교육·체험농장 49개소, 농촌 휴양마을 13개소 운영
- ✓ 청소년 농업 진로 체험, 고위험 직업군 정서 치유, 사회적 취약계층 돌봄 등 180회, 2,886명 운영('23년 기준)
* 산발피해 이재민 치유 텃밭조성 심리 치유



사회적 농업



- ✓ 장곡면 사회적 농업 연간 7,000여명 견학
* 오누이 커뮤니티센터 2022년 7,400명 방문

협동조합 행복농장	만성정신질환자, 청소년, 청년 등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직업재활 등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귀농 희망 청년 등	별의별 이주OO(홍성 귀농이주 체험) 등
오누이농장	지정2리, 도산2리, 상송2·3리 어르신	독거어르신 짝꿍프로그램 등
조아라농장	천태1리 어르신 등	나도 꽃 문 화복지 원예활동, 공동식사 등
란앤징농장	여성 귀농·귀촌인	농업교육 커뮤니티캠프 등
정다운농장	인근 마을 어르신, 초등학생 등	정다운마실, 순화프로그램 등
두리농장	인근 마을 독거노인	반찬나눔 생활관리지원 등
텃밭 협동조합	인근 마을 어르신	텃밭먹거리통신, 공동식사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농업 확산

사회적 농업 바탕, 전 읍·면단위 돌봄체계 구축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 총사업비 194억원
- 사업기간 2023. 3. ~ 2026. 12.
- 사업내용 사회통합돌봄 공공시설 및 통합돌봄문화센터 건립
 - 요양복지시설, 사회적약자공동생활시설, 사회통합공공임대주택, 사회적 농장,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센터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농업 확산 적극 추진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홍성형 투-트랙 전략

민관협력 거버넌스
홍성통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농촌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

앞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 총사업비 212억원
- 사업기간 2025. ~ 2027.
- 사업내용 권역별 문화, 교육, 복지 공간 연결로 문화생활권 조성



치유 농업 힐링 플렉스 조성

- 총사업비 200억원
- 사업기간 2026. ~ 2029.
- 사업내용 친환경 농업·농촌 자원 활용 건강회복, 유지·증진 활동을 위한 복합 치유공간 조성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감사합니다



**진안군 삶의 질 지수
우수사례**

진안고원에 살어리랏다

전북특별자치도



CONTNETS

- I 일반현황
- II 농어촌 삶의 질 지표
- III 우수사례 (환경 · 안전영역)
- IV 진안고원 가볼만한 곳

I.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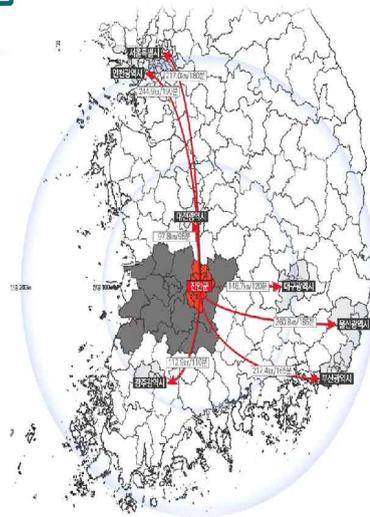
진안 마이산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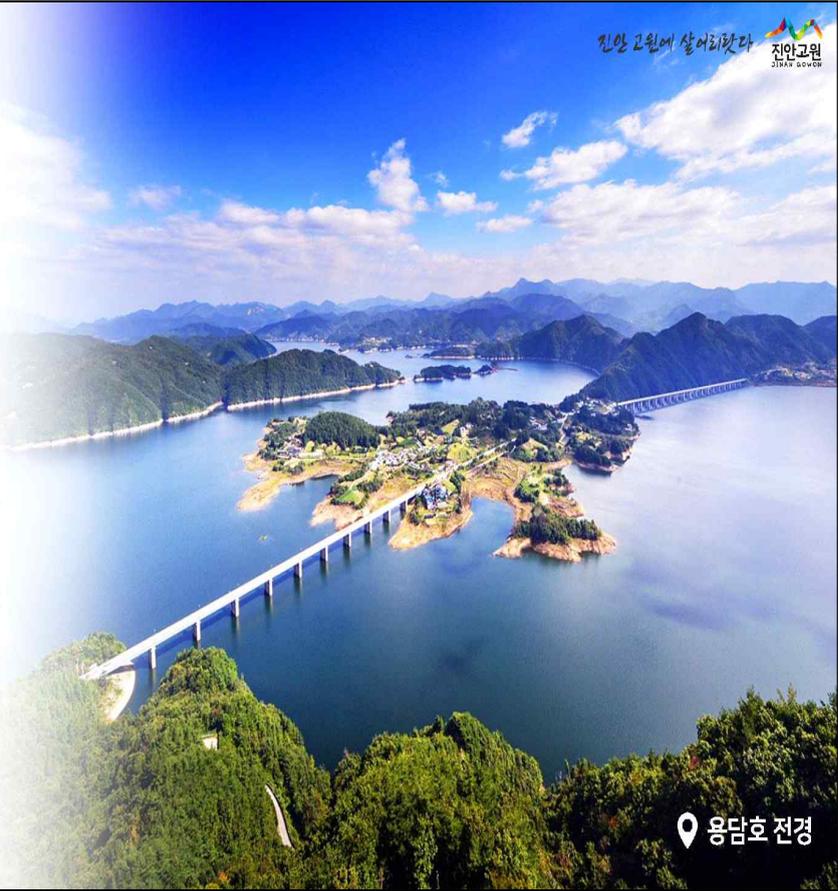
- ✓ 마이산과 용담호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대한민국 유일의 산간 **고원지대**
- ✓ 홍삼과 한약재의 생산·유통산업을 선도하는 **홍삼한방 산업도시** (홍삼한방·아토피 특구)
- ✓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건강도시의 중심**

기본현황

		
재정규모	면적	인구
5,421억원	789.11km ²	24,440명
(재정자립도 6.7%) (재정자주도 56.5%)	(전국의 0.76%)	(65세 이상 39%)



II.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용담호 전경

종합평가결과

- ✓ 경제, 보건복지 등 5대영역 평가 결과 상위지역
- ✓ 환경 · 안전영역 1위



III. 우수사례 (환경 · 안전영역)



부귀 메타쉐쿼이어길

01. 빈집률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7.02%" (빈집수 : 820개 / 주택수 11,683개)

- ✔ 농어촌 주거용 · 비주거용 빈집정비
- ✔ 특정빈집 직권철거
-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
- ✔ 귀농인의 집 운영



02. 지역안전도

 범죄분야 1등급(4년 연속) 유지, 화재·자살률 감소

<p>교통사고 (22년 4등급 / 23년 4등급)</p>	<p>화재 (22년 3등급 / 23년 1등급)</p>	<p>범죄 (22년 4등급 / 23년 4등급)</p>
		
<p>생활안전 (22 ~ 23년 1등급)</p>	<p>감염병 (22년 4등급 / 23년 4등급)</p>	
	 <p>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p>	

03. 하수도 보급률

 전북자치도 하수도 보급률 최고 “**군 지역**”

“ 전북·충청권 150만명의
**생명수 용담호 및 섬진강 상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실! ”

하수도보급률
86.2%

하수처리시설
47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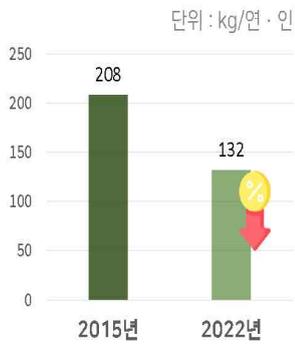
하수처리용량
7.7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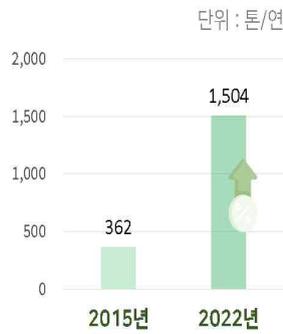
04. 생활계 폐기물 처리량

주민 1인당 생활계 폐기물 처리량 “감소”

쓰레기 3NO운동 : “안태우기, 안묻기, 안버리기”의 범군민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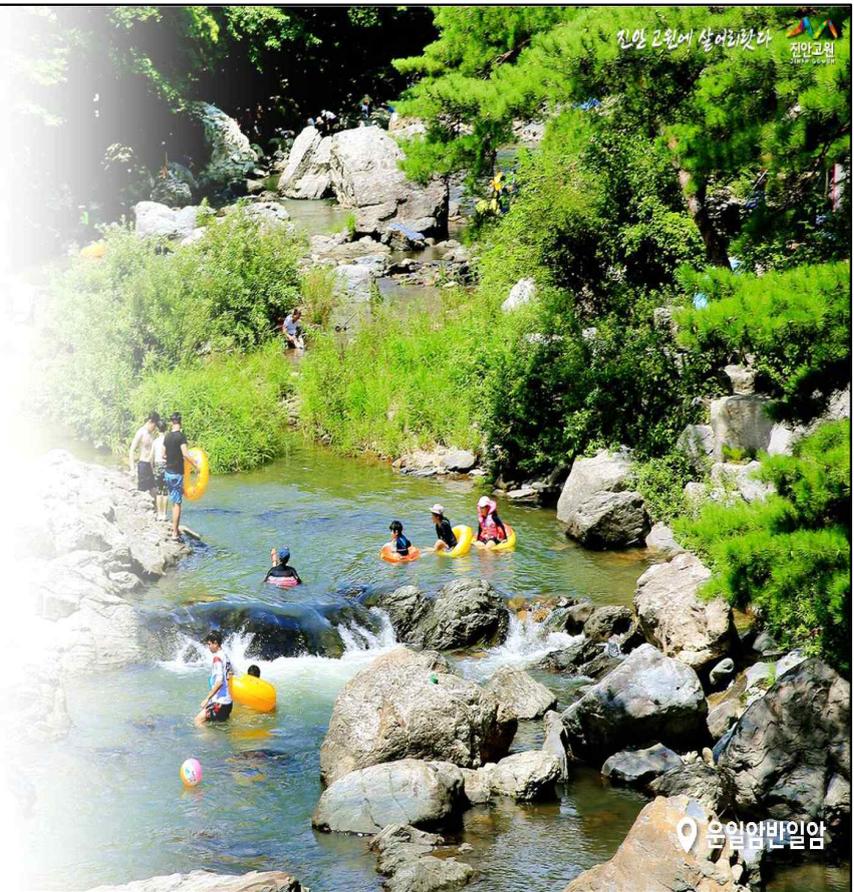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처리량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수거량

<p>클린하우스 설치 및 운영</p> 	<p>읍·면 마을별 생활쓰레기</p> 
<p>재활용가능자원 회수시설</p> 	<p>재활용품 순회 수거</p> 
<p>재활용품(투명페트병)</p> 	<p>우리마을 환경리더</p> 
<p>무인회수기 운영설치</p> 	<p>마을주민 환경교육 실시</p> 

IV. 진안고원 가볼만한 곳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군을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